

2024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2024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2024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2024 연간 활동보고서

2024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Contents

인사말	03	01. SDGs	16	02. 기후 변화	26	03. 공중 보건	38	04. 평화와 안보	44	05. 여성과 청소년	54
2024 연차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04	환태평양지속가능성 대화 2024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TPSD) 협력 및 참여사업 영상메시지	18 20 25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협력 및 참여사업 영상메시지	28 32 37	BKM Global Health Platform 운영 협력 및 참여사업	40 41	북핵 위기와 4강 외교 심포지엄 2024 전방 군부대 위문 및 안보현장 시찰 협력 및 참여사업 영상메시지	46 48 49 53	다문화 청소년 초청 대화 2024 협력 및 참여사업 영상메시지	56 58 61
재단 소개	06										
비전	07										
미션	08										
조직도	09										
연혁	09										
함께 하는 사람들	10										
2024년 정기이사회	12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 개소식	14										
										06. 부록	62
										재단 방문 및 면담 주요 해외 인사	64
										반기문재단 기금 및 사용 내역	66
										주요 해외 언론 활동	68



인사말



반기문 이사장

現)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前) 제8대 UN사무총장

반기문재단의 2024 연차보고서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문재단은 지난 한 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기후위기 대응, 평화와 안전, 공중보건,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보람있는 여정을 기록해 왔습니다. 세계시민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이 바람은 기필코 실현되어야 하고, 반기문재단은 올해에도 변함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상황과 세기적 과제의 이행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82억 인류가 미증유의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입각한 다자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추동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호혜적 질서와 연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위기와 도전 과제는 아무리 큰 국력과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해야 합니다.

올해로 SDGs의 채택과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진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삶을 보다 진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데 이정표가 되어 왔고, 세계시민의 마음을 모으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DGs 17개 목표, 169개 실천과제의 17% 정도 만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섭씨 1.5도’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시민 모두는 두 개의 목표 달성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각국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세계사회개발 정상회의’(2025 Second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결단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될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아마존 지역에서 열린다는 의미에 걸맞게 국제사회가 기후대응을 위한 보다 강력한 행동에 합의하고 실천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반기문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세계시민과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반기문 **반기문**

2024 연차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를 설립하고



김숙 상임이사

現)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現)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前) 주UN대사

우리 재단은 지난 2019년 4월, 갈등과 결핍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목표를 갖고 설립 되었습니다. 지구촌 세계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재단은 지난 한 해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공익재단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력과 참여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반기문 이사장이 유엔 사무총장 재임시 성취해 낸 최대의 업적입니다. 저도 주유엔대사로 일하면서 역사적인 과업에 조그만 힘을 보탬 수 있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기문재단은 설립 이후, SDGs와 파리기후 변화협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SDGs 5년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전달했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협업으로 ‘한태평양지속가능성대화’(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를 창설하여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작년까지 650명의 대학생 기후리더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써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를 설립했습니다. 북경대표처는 한·중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SDGs의 실현, 글로벌 보건 협력, 청년 교류 등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실천적인 활동을 적극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북경대표처는 한·중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며, 기후 행동 및 ESG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서,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북경대표처는 양국 국민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겸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김숙 **김숙**



재단 소개

반기문재단은,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세상을 향하여,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더 공정하고 권리에 기초한 세상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비전

반기문재단은 통합과 소통,
공존과 헌신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재단의 모든 활동에는 지구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의 열정이 담겨질 것입니다.
세계와 함께 세계시민을 위하여,
번영과 협력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반기문재단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세계인의 플랫폼입니다.

지식이 생산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가 교류되는 또 하나의 세상을
탄탄하게 세워 보겠습니다.

VISION

반기문재단은
‘갈등과 결핍이 없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구촌의
미래는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반기문재단은 세계의 그 어느 곳이나,
세계시민 그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분쟁과 재해의 현장에서 원인을 캐고
해결의 씨앗을 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
절망의 굴레를 벗기고 희망의
날개를 달겠습니다.

포용과 담대함을 날줄과 씨줄로
삼아서 갈등과 결핍을 붙들어 맺
조각들을 끊임없이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역량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의 창출을
주도하겠습니다.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미션

MISSION

반기문재단은 ‘통합과 소통’,
‘공존과 헌신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철학과 비전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국내외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제의 구현과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에 열정을 바칠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이를 통한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 증진에 관한 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안겨줘야 할 미래의 비전, 그리고 마땅히 누리게 해야 할 **인권과 권익에 관한**
미래지향적 가치정립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다섯째,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국내외 시민단체,
학술단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통하여 인재의 양성과
세계시민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조직도



연혁

2019

- 03.05 반기문재단 발기인 총회
- 04.15 재단법인 보디나온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설립 허가(외교부)
- 04.18 재단 등기 완료
- 05.10 반기문재단 창립 대회
- 08.05 KINGOLD Group MOU
- 09.30 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 10.30 Boao Forum for Asia MOU

2020

- 01.28 제1차 반기문평화안보포럼
- 04. Broad Group MOU
- 07.29 상반기 활동보고서 발간
- 11.30 Redesign our Future (SDGs 5년과 향후 10년의 과제)
- 12.30 청소년 환경교육 교재 발간 (영문·중문)

2021

- 01~11 ADB 공동사업
- 03.19 제2차 반기문평화안보포럼
- 03~11 반기문 ESG 아카데미
- 06. 2020연차보고서 발간
- 06.29 제3차 반기문평화안보포럼
- 11.23 제4차 반기문평화안보포럼
- 12.23 정기이사회(7차)

2022

- 04.19 'BKM Global Health Platform' 운영 MOU(고려대학교)
- 05~12 대학생 기후환경리더 1~2기 운영
- 08. 제1차 고등학생 SDGs Essay Competition
- 08.29 청년재단 MOU
- 10.07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대학생 멘토링
- 10.20 기후환경 분야 협력 MOU(KEI)
- 10.27~28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2022'
- 12.20 정기이사회(11차)

2023

- 04~12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SDGs 모범학교 인증
- 04.23 주한외교단 초청 행사
- 05~12 대학생 기후환경리더 3~4기 운영
- 07.03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심포지움
- 09.12~14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2023'
- 12.20 다문화 학생 초청
- 12.26 정기이사회(13차)

2024

- 05~12 대학생 기후환경리더 5~6기 운영
- 09.12 북핵 위기와 4강 외교 심포지움 2024
- 09.20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 설립
- 10.07~08 전방 군부대 위문 및 안보현장 시찰
- 10.10~11 한태평양지속가능성 대화 2024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TPSD)
- 11.11 다문화 청소년 초청 대화 2024
- 12.19 2024 정기이사회

함께 하는 사람들

고문



김항식 고문

現) 호암재단 이사장
前) 국무총리
前) 감사원장



공로명 고문

現)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前) 외무부 장관
前) 세종연구소 이사



유종하 고문

現) ahed korea 회장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前) 외교부 장관



이동건 고문

現)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前) 국제로타리재단 이사장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사회



반기문 이사장

現)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前) 제8대 UN사무총장



김숙 상임이사

現)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現)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前) 주UN대사



이봉화 감사

現)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前)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前) 사회보장정보원 초대원장



김영혜 이사

現) 변호사(법무법인 제이)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성욱 이사

現) 서울창학재단 이사장
現)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
現)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안영수 이사

前)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前)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엄기영 이사

現) 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기후환경 회의 홍보 소통위원장
前) MBC 사장



유명환 이사

前) 세종대학교 이사장
前) 외교통상부 장관
前) 주일본대사



유승민 이사

現) 대한체육회 회장
現)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前) 국제탁구연맹(ITTF) 집행위원
前) 대한탁구협회(KTTA) 회장
前)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SF) 이사장



이상희 이사

現)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명예이사장
前) 국방부 장관
前) 합참의장



정내권 이사

現) 타슈켄트 국립경제대학
신기후혁신센터 의장
現) Global Energy Prize 심사위원장
前) UN ESCAP 환경개발 국장
前)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 수석자문관
前) 기후변화 대사

운영위원

(가나다순)

강웅식 운영위원

前) 주멕시코대사
前)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前) 대전광역시 국제관계 자문대사

강천석 운영위원

現) 조선일보 고문
前) 조선일보 주필
前) 조선일보 편집국장

강태선 운영위원

前) 블랙야크 그룹 회장
現)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 이사장
現)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現)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권태신 운영위원

現) 김앤장 고문
前) 한국경제연구원장
前) 국무총리실장(장관급)
前) 주OECD대사

김상기 운영위원

現) 예비역 육군 대장
前) 특수전사령관
前) 제42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김성환 운영위원

現) 태재 미래전략 연구원장
前) 제36대 외교통상부 장관
前) 주 오스트리아 및
빈 국제기구대표부대사

김용학 운영위원

前) 제18대 연세대학교 총장
前)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前) 연세대학교 입학관리처장

김종섭 운영위원

現) 삼익악기 회장
現)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前) 서울대학교 문리대 총동창회 회장
前)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김종훈 운영위원

前) 제19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前)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

김지용 운영위원

現) 국민대학교 이사장
前) 대한수영연맹 회장
前)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장

김천식 운영위원

現) 통일연구원 원장
前) 통일부 차관

김형준 운영위원

現)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現)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前)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前) 국회 개헌특위 위원

김홍일 운영위원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前)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
前) 제25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손명세 운영위원

現) 라이트펀드 이사장
現)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現) WHO 국제보건규칙 제정위원회 의원

손연재 운영위원

前) 리듬체조 국가대표

송호근 운영위원

現)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現)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원장
前) 포스텍 석좌교수
前)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안청시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편집위원장
前)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양창수 운영위원

現)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前)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前) 한양대 법전원 석좌교수
前) 대법원 대법관

오병주 운영위원

現) 국가원로회의 부의장
前) 국무총리실 차관
前) 서울지검 부장검사

오연천 운영위원

現) 울산대학교 총장
前) 서울대학교 총장

유동근 운영위원

現) 한국방송예술인총연합회 초대 이사장
前) 한국방송연기자협회 23대 이사장
前)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유종근 운영위원

現)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現)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회의
이사장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윤덕민 운영위원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前) 주일본대사
前) 국립외교원 원장
前) 대통령 외교안보정책 자문위원

이각범 운영위원

現) KAIST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

이강연 운영위원

現) 한미동맹재단이사
現) 한미협회부회장
現) 한미우호협회자문위원
現) 관세법인 크로스웨이 고문
前) 관세청 차장

임성준 운영위원

現)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고문
前) 주캐나다대사
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한비아 운영위원

現)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現)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前)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홍성관 운영위원

現) (주)상암에너지 회장

사무국

박일호 실장

現) 경영행정실장
前) 주요ول랜드총영사

이병용 실장

現) 기획정책실장
前) 국무총리실 정부실장

최성주 실장

現) 외교안보실장
前) 주폴란드대사

김봉현 실장

現) 대외협력실장
前) 주호주대사

정태용 디렉터

現)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前) ADB 기후 변화 전문가

북경대표처

김숙 수석대표

Miao Chun Sheng
(苗春盛) 대표

Jiang Ling Yuan
(蒋玲媛) 대표

Kang Zhen
(康震) 부대표



2024년 정기이사회

이사장 말씀

재단이 출범한 지 6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사님들의 성원에 힘 입어 국내외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이사님들의 지혜와 영감을 바탕으로 재단이 더욱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 이사들의 간단한 소감 및 소회

김숙 상임이사 |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의 설립 이후,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중 간 우호 협력 계기를 마련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봉화 감사 | 시국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재단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총장님의 리더십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며 세계와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김영혜 이사 | 한해동안 모든 분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익재단으로서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성욱 이사 | 올해를 끝으로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임기를 마치지만, 내년에도 반기문재단과 함께하는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기영 이사 | 지구와 인류를 어떻게 살리는가를 위한 논의가 내년 새해 첫 아젠다로 설정되어 기쁩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The Quiet Diplomat”에 담긴 총장님의 철학이 모든 행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희 이사 | 국내 기부금이 해외에 비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내권 이사 | 재단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SDGs와 기후 변화 관련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bottom-up 접근법을 통해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 설립 09/20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 설립

- 2023.09.22 중국 정부에 설립 신청
- 2024.08.23 중국 정부 허가 취득
- 2024.09.12 반기문재단 이사회의 설립 승인
- 2024.09.20 개소식 개최



격려사

반기문 이사장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민간부문, 학계 간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임. 특히,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나아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음.



인사말씀

김숙 수석대표

중국 정부가 반기문재단 북경대표처 설립을 허가하고 지원해준 데에 감사를 표함. 북경대표처는 중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건설'이라는 비전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3대 이니셔티브'를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기여할 것임.



축사

정재호 주중한국대사

반기문재단의 북경대표처 공식 출범을 축하함. 북경대표처가 한·중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대독)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Shen Xin(沈昕) 부회장

반기문 이사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셨음. 반기문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글로벌 3대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추진해나갈 것임.



KINGOLD Group Chau Chak Wing(周泽荣) 회장

반기문 이사장과 함께 중국과 한국 간의 우호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인류 전체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기대하겠음.

01 SDGs

한태평양지속가능성 대화 2024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TPSD)	18
협력 및 참여사업	20
영상메시지	25

환태평양지속가능성 대화 2024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TPSD) 10/10-10/11



사업 배경 및 목적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반기문재단과 스탠포드대학교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임.

사업 계획

- 아·태 지역의 정부 지도자, 학계 및 전문가들 간 담론과 파트너십 추진을 통해 2030 SDGs 의제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SDGs 17개 목표에서 매년 글로벌 중점 과제 중 하나를 대화 주제로 설정함.
- 2022년~2026년까지 5년 간 역내 순회 개최 예정임.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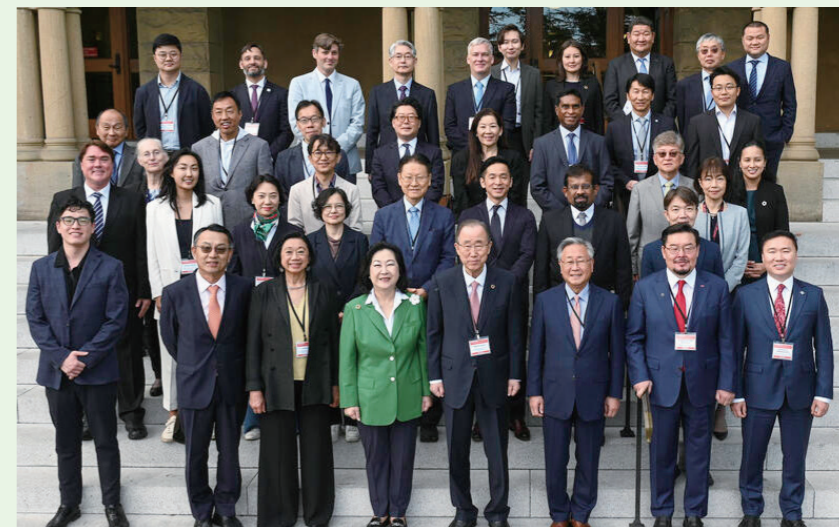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연구 및 정책적 협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함. SDGs 17개 목표 중 하나인 산업·혁신·인프라 구축(SDG 9)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 회복력이 있는 인프라 구축과 포용적 산업화를 주제로 경제 성장과 인간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모범 사례를 검토함. 나아가, 혁신적인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고소득·중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춤.

Commission(FCCC)이 주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탄력적 인프라 및 지속 가능한 산업화 추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최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혁신적 에너지 인프라 금융 촉진' 등 다양한 분야 학자들의 토론 및 발표를 진행함.

- TPSD와는 별도로, 몽골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온 'Trans Altai Sustainability Dialogue(TASD) 2024'를 2024.04.25.-04.26.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하였으며, 'TASD 2025'는 2025.06.12.-06.14.에 개최할 예정임.

- 반기문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인류와 지구를 위한 녹색 전환의 실현과 동시에, 새로운 학습 방법을 탐색하고 혁신을 위한 문화를 창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새로운 시스템과 해결책을 도입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경직된 기존 관행을 혁신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APARC가 주최한 '고등 교육과 지속 가능한 혁신에서 세계 지도자의 역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한 '범 분야 기후 변화 외교 추진', Fijian Competition and Consumer



협력 및 참여사업

Asian Development Bank (ADB) 특강 02/27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 다자개발 은행은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끌어야 함.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은 미래 세대와 지구를 위한 우리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임.



제6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세션 주제 03/14-03/15

'Reboot the SDGs, Reset our Future'

기후 변화, 기아, 인플레이션, 불평등, 부채 등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금융 체계의 재정비 또한 이뤄져야 함. 이러한 도전 과제는 협력 없이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국가와 개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함.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축하 03/25

'The Era of Uncertainty: Shaping New Korea-Africa Joint Cooperation Strategy'

이번 포럼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 지속가능발전, 인적 교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대변을 통해 경제 협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함. 양 지역 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의 중심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24 03/26-03/29

'Asia and the World: Common Challenges, Shared Responsibilities'

서로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단결, 협력, 다자주의, 세계화, 그리고 개방된 세계 경제임.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더 큰 통합과 협력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옹호함으로써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세계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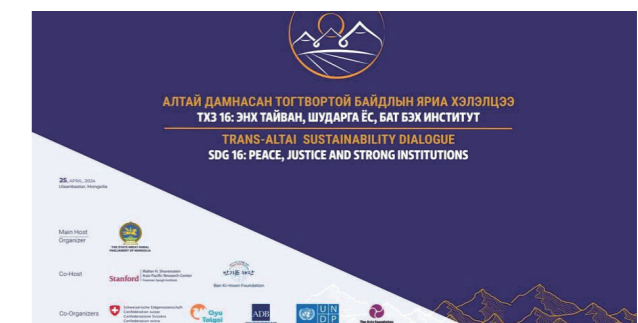
UN Global Compact Korea 정기총회 특별강연 04/04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새로 발족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람. ESG는 기업의 부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정보·세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중심으로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람.



2nd Annual Trans-Altai Sustainability Dialogue 축하 04/25 - 04/2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SDG 16)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체를 관통하는 항구 실과 같음. 따라서 SDG 16을 달성하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진정한 포용적인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 이번 행사가 SDGs의 핵심 정신인 '포용성'에 공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음.



King's College London 강연 05/01

'The role of multilateralism under current global challenges: A talk with Ban Ki-moon'

세계는 현재 기후 위기, 팬데믹, 분쟁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완화, 평화 구축, 인권 증진을 위해 단결하고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함.





I Kellogg College, Oxford University 강연 05/02

'Inaugural Human Rights Lecture: Human Rights in a Fractured World'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 국제 협력, 조용한 외교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 인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후 행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



I University Presidents Meeting 2024 기조연설 05/15

대학은 단순한 학습 기관을 넘어 기후 변화와 빈곤 등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대학은 끊임없는 연구와 비판적 사고로 미래 리더를 양성해야 함. 또한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글로벌 협력과 포용적 접근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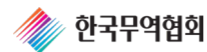
I The King Charles III Harmony Award 수락 연설 06/11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선도적인 비전과 노력에 찬사를 보냄. 오늘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과거에 비해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화하고 있음.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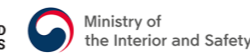
I 한국무역협회 명예고문 위촉식 연설 06/18

오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무역협회 명예 고문직을 맡게 되어 영광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기 둔화 속에서 한국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세일즈 외교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임. 무역협회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국 무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함.



I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 "Fostering Innovation amid Global Challenges" 기조연설 06/24-06/26

인공지능(AI)은 공공 서비스 혁신과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코로나19와 기후 변화로 지연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AI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함. 윤리적 사용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I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특강 08/19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한 나라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투자와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며,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함으로써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함.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ODA 예산을 확대해야 함.



I 2024 ESG Global Leaders Conference 폐회사 10/16 - 10/19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노력이 야심 찬 기후 목표 달성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가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중국이 제안한 모든 계획과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함.



I 제16회 한일 친선회의의 특강 10/24-10/25

세계 평화를 위한 로타리 한일 교류의 역사적 의의: '로타리, 한일 화합과 세계 평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인 사람(People), 지구(Planet), 평화(Peace), 번영 (Prosperity), 협력(Partnership)의 5P는 로타리에 꼭 필요한 덕목임. 회원 모두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람.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cheon
Metropolitan City

8th Regional Symposium on

Effective Governance and AI Transformation for the 2030 Agenda:
Fostering Transformative Actions for Innovating Public Services

30 October - 1 November 2024
9:00 AM - 5:00 PM Seoul (GMT+9)
Incheon, Republic of Korea and Online

오정(淸丁)리질리언스연구원 10주년 축하 10/29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설립 10주년을 축하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니터링과 기후 변화 대응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은 필수 과제이며, 연구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함. 이번 10주년이 연구원의 도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8th Regional Symposium on Effective Governance and AI Transformation for the 2030 Agenda 기조연설 10/30-11/01

‘Fostering Transformative Actions for Innovating Public Services’

UN-DESA와 UNPOG의 연례 지역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며, 올해 주제인 2030 SDGs 의제를 위한 AI 전환은 시의적절함.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감축이 긴급히 요구되는 가운데, AI는 재생 가능 에너지 통합과 수요 예측에 기여할 수 있음. 이번 심포지엄이 AI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cheon
Metropolitan City

UNGC Korea Leaders Summit 2024 축하 11/05

‘UNGC Korea Leaders Summit 2024’ 개최를 축하하며, ESG 경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기후 변화 대응, 성평등 증진,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행동이 요구되며, 유엔 여성역량 강화원칙(WEPs)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함. 이번 행사가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ESG 투자 확대를 논의하여 미래지향적 해법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연세대학교 강연 11/20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독보적인 사례로, 연세대학교는 국제적 책임감과 세계시민의식을 실천하는 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옴. 대학생들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국제 협력에 앞장서야 하며, ‘열정과 온정’의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함. 열린 사고와 인성 함양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자질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lking Philanthropy 2024 영상 메시지 11/20

대규모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 기후 위기 대응, 불평등 해결에 활용해야 함. 세대 간 대화를 통해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가족, 정부, 국제기구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Unlock the Future Coalition’과 같은 글로벌 협력 사례를 통해 이번 포럼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도출하길 바람.



Boao Forum for Asia Seoul 2024 개최사 11/22

세계는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실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중국이든 미국이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일 국가도 혼자 이겨낼 수 없음. 따라서, 대화, 외교와 협상 등 단합된 대응을 통해 글로벌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가 빈곤퇴치, 재생에너지, AI 및 신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재점화하는 노력은 개방적 지역주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



영상메시지

RELX SDG Inspiration Day 2024, 2024 Chery International User Summit, 2024 Korea Business Expo Vienna 영상 메시지 등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02

기후변화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28
협력 및 참여사업	32
영상메시지	37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사업 배경

- 현재 기후 위기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 습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 필요
- 2022년부터 보다는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과 대자연은 세계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증진 및 글로벌 기후환경리더 양성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 ‘반기문 제 8대 UN사무총장과의 만남’, ‘글로벌 환경 전문가의 강의’ 등을 통해 범세계적인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후환경리더로서의 비전 함양
- NET ZERO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 양성



사업 내용

- 반기문평화공원 및 반기문평화기념관에서 개강식과 종강식 개최
- 환경 국제기구 UN/IUCN, NET ZERO, 지구가열화, 미래세대의 역할 등에 대한 글로벌 환경 전문가들의 강의 수강
- NET ZERO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온라인 팀별 토론
- 실천키트를 활용한 NET ZERO 실천활동
- NET ZERO 제안 발표회 및 수료식 진행
- 수료자 사후 프로그램으로 수료자 모임 “The CELDERS (Climate Environmental Leaders)” 프로젝트 진행



사업 개요

- 대학생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은 반기문 제 8대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탐구하면서, 미래세대 환경리더로서 꿈과 비전을 품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UN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지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학생 기후환경 리더로서의 경험과 사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장을 제공함.

- 종강식에서는 우수 참가자들이 넷제로를 위한 제안 발표서를 발표함으로써 기술, 문화, 플랫폼, 그린 캠페인, 경제, ESG 등 환경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도출함.
- 수료자에게는 수료자 모임 “The CELDERS(Climate Environmental Leaders)”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CECR (Climate Environmental Campus Rankings) 프로젝트를 전개하도록 하고, 수상자에게는 기후환경 자문위원으로서 양성과정 제안 및 토론헬동 멘토링에 참여하는 등 환경 프로그램 자문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2025년에는 1기부터 6기까지의 우수 제안서 모음집을 발간하여, 각 대학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해 공유할 계획임.



사업 실적

- 1기 (2022.05.01-2022.07.31): 기후환경 리더 150명 배출 (78개 대학, 2개 대학원)
- 2기 (2022.09.15-2022.12.15): 기후환경 리더 100명 배출 (56개 대학, 1개 대학원)
- 3기 (2023.05.01-2023.07.31): 기후환경 리더 100명 배출 (65개 대학)
- 4기 (2023.10.01-2023.12.31): 기후환경 리더 100명 배출 (57개 대학)
- 5기 (2024.05.01 -2024.07.31): 기후환경 리더 100명 배출 (55개 대학)
- 6기 (2024.10.01-2024.12.31): 기후환경 리더 100명 배출 (63개 대학)



5기 참가자 NET ZERO 우수제안

NO	이름	대학명	학과	키워드	발표 주제	최종 성적
1	변효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글로벌환경경영학	그린캠퍼스	플라스틱 없는 캠퍼스	대상
2	한지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플랫폼	의류 재활용을 제고 방안: 국내외 협력을 통한 AI 수거 시스템 구축	최우수상
3	구아진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폐기물	야구장도 이젠 ecofriendly하게!	우수상
4	즈바리 오마이마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	대학 내 이공계 연구실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 제안	우수상
5	박주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의류	심리를 이용하여 지속가능 패션브랜드 성장시키기	장려상
6	이다빈	동덕여자대학교	유러피언스터디즈	그린캠퍼스	Green Campus 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학생활	장려상
7	남세영	동양미래대학교	자동차공학과	폐기물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구축: 해양폐기물 수거 보상 제도	장려상

6기 참가자 NET ZERO 우수제안

NO	이름	대학명	학과	키워드	발표 주제	최종 성적
1	안혜주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원예학과	자원순환	자연 순환 쇼핑백	대상
2	김강현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에너지	수소운반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 컨소시엄 구상	최우수상
3	안예빈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그린시티	그린시티 실현을 위한 교통전략	우수상
4	최지현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그린시티	제주의 환경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	우수상
5	김선빈	서울대학교	환경설계학과	생태계	블루카본 활용 바다 숲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 전략	장려상
6	황진욱	경북대학교	식물의학과	농업	탄소저감 청년 농업인 양성과정 제안	장려상
7	송수민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분쟁분석해결학과	식품	식품의 전 과정 평가(LCA)를 통한 환경 보호	장려상

프로그램 수료자 향후 진로

기수	이름	향후 진로
1기	김현희	WFK청년중기봉사단 (KOICA그린봉사단) 이집트 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7) 참석
1기	박하	KOICA NGO 봉사단(기후환경분야): 방글라데시 환경 NGO 근무
2기	주채현	KOICA NGO 봉사단(기후환경분야): 방글라데시 환경 NGO 근무
2기	김한나	KOICA NGO 봉사단(기후환경분야): 방글라데시 환경 NGO 근무
2기	조혜원	KOICA NGO 봉사단(기후환경분야): 방글라데시 환경 NGO 근무
4기	안현비	보dana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10기 인턴 근무
4기	송예진	보dana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11기 인턴 근무

협력 및 참여사업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 기념 리셉션 03/05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국이자 의장국인 한국이 필리핀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전 세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람.



World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24

연설 02/07-02/09

UNEP 2023년 적응 격차보고서는 기후 변화 적응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진전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자간 파트너십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한국라이온스 창립 제65주년 기념 학술포럼 기조강연

02/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과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성사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존공영의 과업임. 하지만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화석에너지의 사용은 글로벌 차원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한국라이온스가 세상을 일깨우고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 행동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대한 대의를 위해 힘차게 나서주기를 기대함.



인천대학교 법학부 초청 특강 03/22

‘기후 위기와 대학의 역할’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했지만, 그 이면에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도전을 남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인 관심과 실천적 규범이 늦기 전에 구체화하여야 함.

※ 인천대학교 법학부 학생들이 선택한 가장 인상 깊었던 전공 진로 특강 시리즈로 선정.



연세대학교 강연 04/17

‘기후 위기 대응과 대학의 역할’

산업혁명 이래, 세계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화석연료의 무제한 사용으로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warming)와 지구가열화(heating)를 넘어 지구비등화(boiling) 시대를 맞고 있음. 경제와 생활 전반이 탄소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업의 대전환을 넘어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함. 청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앞장서 행동하길 바람.



Ban Ki-moon in Conversation with Mary

Robinson Chatham House UK 05/03

‘Unlocking the UK’s leadership potential on global goals and climate’

기후 변화는 모든 문제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각국은 적응 기금(adaptation finance)을 확대하고 기후 행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특히, 아프리카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해 균형 잡힌 기후 금융이 시급하며, 영국은 국제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2035년까지 연간 1조 3천억 달러 목표의 기후 금융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반영하며 기후 적응과 완화를 지원해야 함.



인천광역시 ‘2045 탄소중립’ 명사 특강 05/24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지자체의 역할’

‘2045 탄소중립’을 선포한 인천은 15개의 국제기구가 자리한 글로벌 도시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며, 인천의 탄소중립 실천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함.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사 05/29-05/31

기후 변화는 극단적 기상 현상과 생태계,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인류의 가장 심각한 위협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개혁이 필요함.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도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함. 모두가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람.





2024 Korea-Africa Summit: High-level Forum on Accelerating Access to Green and Climate Finance for Africa 개최사 06/04-06/05

한국과 아프리카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함. 말라위의 가뭄과 케냐, 탄자니아의 홍수는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후 금융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 GGGI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산업, 세대, 성별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함. 국제 사회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함.



2024 국제기후포럼 기초연설 06/04

‘탄소중립과 기후테크’

기후 위기는 인류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해결을 위해 기후테크 (Climate Tech)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지속 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러한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함.



The GGGI Country Office Opening Ceremony 개최사 06/07

GGGI의 키르기스스탄 사무소 개소식과 기후 회복력 강화 프로젝트 시작을 축하함.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홍수 및 가뭄 관리를 통해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여와 협력이 필요한 마라톤과 같으며, 이번 협력이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줄길 기대함.



인천공항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강연 07/08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공사는 세계 최고의 항공 운영기업으로 위상을 키우고 있음. 이러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인천공항의 ‘비전 2040’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임직원 모두가 세계시민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의 각오와 의지가 필요하며, 기업인·전문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야 함.



Indonesia Net-Zero Summit 2024: Climate Crisis 영상 캠페인 08/24

현재 인류는 전례 없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인류를 기후 재앙으로부터 구할 기회는 단 한 번뿐임. 인도네시아는 환경 강국이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함께 협력하길 바람.



Africa Food System Summit 2024 - Climate Smart Finance to Boost Resilience 환영사 09/02-09/06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은 소규모 농민들의 노력에서 비롯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규모 농민들이 받는 기후 금융은 0.8%에 불과함. 우리는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빈곤을 줄이고 그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민들을 지원해야 함. 또한, 개발도상국에 적응 기금(adaptation finance)을 두 배로 확대하고, 농업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함.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기초연설 09/05

초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조기 사망자 수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50년 1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연적 과제임을 보여줌. 초국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직접 이끌거나 국회에 기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법과 예산을 마련해야 함.



COP29 GYCC Event 축하사 11/13

COP29에서 열린 Global Youth Climate Challenge(GYCC)를 축하하며,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와 리더십이 필수적임. 기후 변화 대응은 정부와 민간 협력, 산업 구조 재편, 교육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며, 청년 리더들이 강력한 기후 정책과 투자를 촉구하기를 바람. 청년들의 활약을 지지하며, GYCC의 성공을 응원함.



UNCCD 1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개최사 12/02-12/13

올해 더욱 심각해진 기후 위기는 가뭄, 홍수, 극심한 기상 환경의 변화, 나아가 사막화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UNCCD에게 지지를 표함.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녹색 성장 커뮤니티를 촉진하고, 기후 금융을 확대하며, 녹색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함.





CityUHK Distinguished Lecture cum School of Energy and Environment 15th Anniversary Symposium on Global Sustainability and Energy Innovation 강연 12/06

우리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함께 할 때 주어진 과제와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거듭 목격해 왔음. 특히, 현재 기후 위기로 인해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가 심각한 상황임.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맞서야 함.



International Forum on Education and Climate 기조연설 12/13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 교육(climate education)의 세계적 통합이 시급함. 교육자, 기업 리더 또는 사회 리더들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이행되도록 도와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음. 젊은 세대가 열정과 온정으로 행동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가르치고 교육할 것임.



INTERNATIONAL FORUM ON EDUCATION AND CLIMATE

13 December 2024
09:00 AM - 14:00 PM
Livestream from Schloss Leopoldskron
Salzburg, Austria

영상메시지

극지연구소 설립 20주년 축하, 제4회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축하, Hong Kong Quality Assurance Agency (HKQAA) 35th Anniversary Forum, APAC Wind Energy Summit 2024 영상 메시지 등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세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함.



03

공중보건

BKM Global Health Platform 운영 40

협력 및 참여사업 41

BKM Global Health Platform 운영



플랫폼 운영 사업 배경 및 목적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의 협력사업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Platform for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Solutions’ 웹사이트 플랫폼 모형을 개발함.
- 고려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운영 및 관리 유지하며, 감염병 대처 등 Global Health에 기여함.

사업 내용

-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등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 플랫폼 운영유지 및 활성화함.
- 신종 감염병과 팬데믹을 예측하고 대비해 글로벌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함.
- 플랫폼에서는 국제기관 및 교육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Covid-19 현황을 비롯해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략과 전망, 국제보건규칙 개선 방향과 ICT 기반 대응 시스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
- 2023년에는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는 의료 학교의 교육 역량 혁신”이라는 ADB T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에게 학습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E-러닝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함.
- 2024년에도 기존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공공기관, 학계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의료개혁을 촉진함.



협력 및 참여사업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od Security and Systems in Africa" 메시지 07/08-07/17

UNFAO에 따르면, 2022년 7억 8,300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20%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음. 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는 세계 식량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 혁신, 포용의 가치가 필수적임.



The 3rd Conference of the BFA Global Health Forum (GHF) 개최사 07/16-07/18

'Health Beyond Health – In the Ye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30'

코로나 19는 더 나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긴밀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대해 냉철한 교훈을 주었음. 이번 포럼은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함. 글로벌 위기는 글로벌 대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함.



충북 음성군 지역 전립선 검진 봉사 사업 축하 11/02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로, 노년 남성을 위협하는 질병 중 하나가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사업의 일환으로, 30여년간 전립선 질환을 홍보하고 진료하는 데 앞장서 오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에 존경과 박수를 보냄.

Rotary District 3650 국제로타리3650지구 韓國前立腺管理協會 Korea Prostate Health Council, Inc.

The 2nd World Health City Forum 2024 메시지

11/12

기후 변화, 공중보건 위기, 불평등 등 도시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화가 필요함. SDG 3, 11, 13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과 혁신적 해결책이 중요함. 도시는 성장과 지속 가능성의 중심지로, 이번 포럼이 도시를 인류와 지구 건강의 촉매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WORLD HEALTH CITY FORUM



제3차 한-몽 미래전략포럼 축하 11/14-11/16

제3차 한-몽 미래전략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몽 포럼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시작으로 보건 협력까지 논의 범위를 확장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음. 이번 포럼이 양국의 미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 발전의 정기적인 협력의 발판이 되어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함.

HERALD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메시지 11/18

전 세계 7억 3,5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23억 명이 식량 불안을 겪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음. 충분한 식량 생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한 투자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제안은 국가적 자원, 재정, 지식을 결집해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모두가 양질의 식량과 존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함.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제4회 김우중 의료인상 시상식 축하 12/0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 중 하나는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임. 전쟁, 재난과 달리 질병은 소리 없이 개인, 가족, 나아가 마을을 잠식함. 이때, 한 명의 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가 살리는 것은 한 생명을 넘어서 한 공동체의 미래임. 어떠한 도전도 마다하지 않고 인류애를 실천하신 김우중 회장님과 대우재단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대우재단

04

평화와 안보

북핵 위기와 4강 외교 심포지엄 2024	46
전방 군부대 위문 및 안보현장 시찰	48
협력 및 참여사업	49
영상메시지	53

북핵 위기와 4강 외교 심포지엄 2024

09/12



사업 배경 및 목적

-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과 고려대학교 통일융합 연구원은 북한 핵 대응을 위한 전략적 4강 외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함.
-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효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2023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한미 동맹: 자유·민주·번영의 가치동맹을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함.

반기문 이사장 기조연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한미 동맹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대외개방형 경제국가로서 자체핵무장은 선택지가 될 수 없음. 한미 원자력협정을 재개정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미국의 새 정부와 협상해야 함. 또한, 북한 핵 문제를 인권 등 북한의 제반 문제와 결부시켜 종합적인(holistic) 프레임 속에서 다루고, 강력한 자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함.

김동원 고려대 총장 환영사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강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램.

조태열 외교부 장관 축사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험함. 북핵 문제 해결은 4강 외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압박이 필요함.

프로그램

- 제1세션: 북핵 실태 및 다자·양자 협상 평가
[좌장] 김 숙 前 UN 대사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 제2세션: 북핵 해법을 위한 4강의 입장
[좌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반기문재단 이사)

최근 북핵 사태 평가와 향후 전망	Brian Myers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북한 비핵화 가능성 및 방안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패널 토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북핵 해법: 미국의 입장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북핵 해법: 중국의 입장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북핵 해법: 일본의 입장	이 혁 (한일미래포럼 대표)
북핵 해법: 러시아의 입장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패널 토론	심윤조 (前 국회의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와 4강 주요국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지향적 대응 방안을 도출함. 이를 기반으로 권위 있는 국내 외교·안보 토론회로서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함.
- 2025년 9월에는 반기문재단과 고려대 통일융합 연구원이 함께 ‘국제정세와 우리의 안보’ 토론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과 이를 위한 전략적 외교·안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제2차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북핵 위기와 4강 外交 : 4강 外交를 통한 북핵 해결

2024년 9월 12일(목) 14:00~17:50
고려대 SK미래관 1층 최충헌홀

개막식

국민의례	채수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환영사	김동원 고려대 총장
14:00 ~ 14:40 특별축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영호 한국일보 회장 겸 고려대 교우회장
기조강연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기념촬영	

제1세션 : 북핵 실태 및 다자 및 양자 협상 평가

좌장: 김 숙 前 UN 대사

14:50 ~ 15:50	발제 1. 최근 북핵 사태 평가와 향후 전망	Brian Myers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
	발제 2. 북한 비핵화 가능성 및 방안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신범철 前 국방부 차관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2세션 : 북핵 해법을 위한 4강의 입장

좌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16:10 ~ 17:50	발제 1. 북핵 해법, 미국의 입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발제 2. 북핵 해법, 중국의 입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발제 3. 일본의 북한 핵 문제 대응	이 혁 한일미래포럼 대표
	발제 4. 북핵 해법, 러시아의 입장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심윤조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 한윤상 前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책임교수

주최 반기문 재단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통일교육센터(국제지역학)

후원 한국일보

문의 이메일: june2353@korea.ac.kr
전화: 02)290-2653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2024 연례 활동보고서

46

47

전방 군부대 위문 및 안보현장 시찰 10/07-10/08



사업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강조에 더불어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전방 부대 방문을 실시함. 이번 방문을 통해, 국방의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장병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토 방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사업 내용

- 방문 장소: 강원 양구 소재 육군제21사단 백두부대, 강원 고성 소재 육군제22사단 울곡부대
- 주요 활동:
 - 반기문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들의 전방 부대 방문
 - 장병들과의 소통 및 위로, 격려의 자리 마련
 -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 표시 및 지속적인 지원 약속

반기문 이사장 말씀

-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철통 같은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헌신과 국토 방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자유 속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음. 또한, 안보의 경제는 불가분의 일이기 때문에의 장병 여러분들은 군인이면서도 산업과 경제의 역군이고 따라서 늘 성원을 아끼지 않겠음.



협력 및 참여사업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축하 01/06

북한은 대한민국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국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사변 준비를 촉구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민적 통합과 결속이 필수적임. 통합과 민생을 최우선 급선무로 실천했던 김대중 시대를 반추해 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들 가슴에 물결쳤던 자신감과 역동성을 회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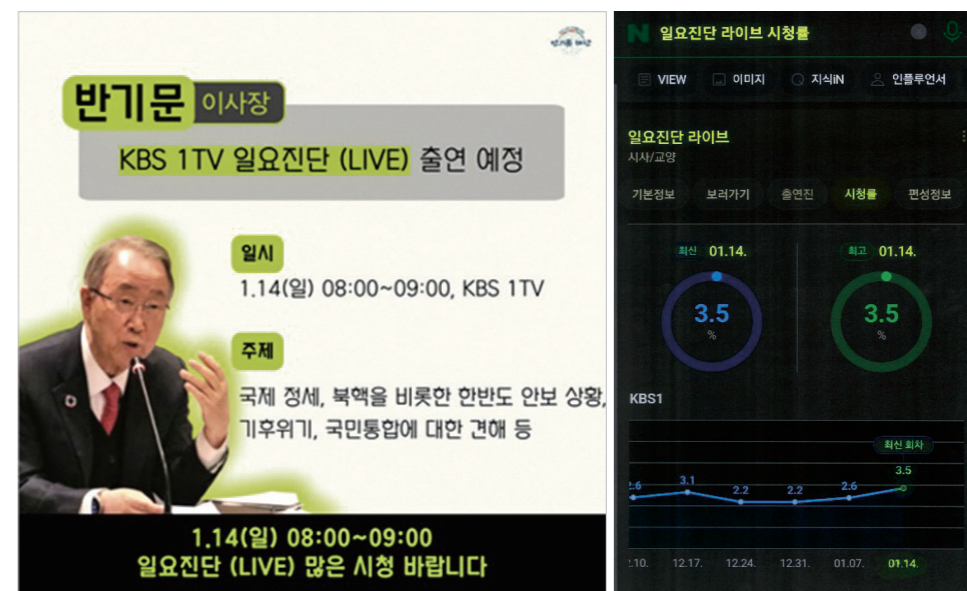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01/14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예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간의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 동맹은, 현재 우리 일상 전반을 포괄하는 가치동맹으로

확대·발전하고 있음. 또한,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만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확고히 해야 함.

※ 2024년 일요진단 최고 시청률 기록



I Munich Security Conference 기조연설 02/16-02/18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필요함. 이러한 목표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자주의를 강화해야 함. 국제적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함.



I Cinema for Peace Award 수상 02/19

이 상은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저의 헌신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됨.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 인권, 그리고 발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와 원칙임. 가자 지구에서의 모든 폭력 중단과 인질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을 단호히 비판함. 이 모든 비극을 즉시 멈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



I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식 축하 03/06

현재 국내외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이 세계 정치·경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학계의 담론을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함.



I 태재미래전략연구원 포럼 기조연설 04/03

‘AI 시대, 세계 안보의 길을 묻다’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으로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도, 철저히 파괴할 수도 있음. 그러므로 AI의 국제적 규제와 협력이 필요하며, 전 지구적 문제인 만큼 해결책 또한 범지구적이어야 함. 다자협력 기구의 창설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안전조치와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I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 초청행사 인사말 04/05

유엔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음. 특히 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유엔군의 참전은 유엔의 집단안보 체제가 가장 성공적으로 작동한 사례이며, 이후 유엔사가 지속적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국제연대의 모범사례임.



I 육해공군 합동아카데미 강연 05/21

외교와 안보는 상호 긴밀한 관계로 국가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군은 외교적 요소와 국제 정세에 대한 소양을 가져야 함.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군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함. 나아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군의 역할과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함.



I 제21회 해군 함상토론회 개최 축하 05/30

「제21회 해군함상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해군과 해양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함. 바다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자 기후 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제정세 불안과 자국 우선주의로 갈등의 공간이 되고 있음.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게 사용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 이번 토론회가 해양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를 기대함.



I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 축하 07/11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그들이 처한 인권 상황과 바깥 세계에서 그들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북한 사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함. 이를 통해, 인권 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함. 현재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의도적인 소통 단절, 무력 도발을 앞세우고 있음. 북핵과 더불어 인권 문제를 최우선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끊임없이 확산시켜 나가야 함.



I 2024 국제한반도포럼 기조연설 09/03

통일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 특히 중국은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외교 당국과 사회단체들은 한미 동맹이 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함. 통일된 우리나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선도하며, 중견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해야 함.



I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 기조연설 09/10

74년 전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으며, 오늘날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 되었음. 이제 우리는 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상징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함.



I 2024 AKUS 부산대회 기조연설 10/03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유일한 교두보이자 최후의 저항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현재의 세계적 분열 속에서도, 한미 동맹강화를 통해 우리는 굳건한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음.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함.



이 상은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하도록 독려함. 다양성 속의 통합, 역경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기를 바람.

I 제1회 인터폴 미래치안 회의 축하 10/23-10/25

‘인터폴 미래치안 회의’의 대한민국 첫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며, 사이버 안보와 AI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함. 신기술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하며, 정부·기업·학계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치안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I Order of Chinggis Khaan Award 수상 11/02

‘칭기즈칸’은 비전과 혁신, 굴하지 않는 결의의 상징임. 혼란의 시대 속에서, 공통된 비전 아래 다양한 민족을 통합한 그의 능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협력, 다양성과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줌. 이 상은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하도록 독려함. 다양성 속의 통합, 역경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기를 바람.



I 평택국제평화·안보 포럼 축하 11/07

평택시는 한미 동맹과 기후 위기 대응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의 근간이며, 미국 상·하원의 주한미군 유지 결정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평택은 주한미군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국제 평화도시로 성장하며, 세계적 모범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I 2024 접경지역 발전포럼 기조연설 11/13

한미 동맹 수호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북한 비핵화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 핵무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임.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방위비 분담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파리협정 탈퇴는 중대한 오산으로 국제적 대응이 필수적임.



I 2024 한국-유엔사친선협회 세미나 축하 11/15

‘글로벌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유엔군사령부’ 현재 세계적인 갈등이 국가 안보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임.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안보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안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토론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I 제1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수락 연설 11/29

국제사회 원로 그룹 ‘The Elders’를 대표해 제1회 미원평화상을 수상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함. 고 조영식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미원평화상은 분쟁 완화와 평화 증진에 앞장서 온 ‘The Elders’의 가치를 반영함. 이 상이 전쟁 종식과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통해 평화와 인류애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상금을 전 세계 파트너와 커뮤니티에 헌정해 청년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특강 12/03

‘통일 외교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통일 정책은 다중 이해당사자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함.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임. 따라서, 공공외교의 3대 수단인 문화, 지식, 정책을 융합한 창의적인 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상메시지

워싱턴 의회교류센터 개소식 축하,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축하, Gandhi Smaraka Nidhi – International Conference 2024 연설, 35th Anniversary of the the Stimson Center 영상 메시지 등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05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초청 대화 2024	56
협력 및 참여사업	58
영상메시지	61



다문화 청소년 초청 대화 2024 11/11



사업 개요

- 충북 충주, 음성, 괴산, 증평 지역의 다문화 중·고생 약 100명을 반기문 평화기념관에 초청하여 반기문 이사장의 격려사 및 대화의 시간,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짐. 이를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양함.
-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특별 강연 전문을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함.

사업 내용

1. 평화기념관 및 생가 견학 :

학생들은 반기문 평화기념관과 생가를 방문하여 반기문 이사장의 유엔 활동 및 발자취를 통해 평화와 안보, 발전, 인권의 가치를 체험함.

2. 반기문 이사장 특강 :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함양,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자세, 그리고 실천 방안을 제시함.

3. 학생들과의 대화 및 오찬 :

학생들과 자유로운 대화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짐. 참여 학생들의 소감을 듣고 미래를 격려함.

4. 체험활동 :

특강과 오찬 이후, 학생들은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 (평화기념관 투어, 에코백 만들기 등)에 참여함.

기대효과

- 다문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지역 및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에 기여
-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 및 지원



반기문 이사장 강연 내용

지구 평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러한 실천은 꿈과 희망을 품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됨.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며, 최대한 지원할 것임.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국경, 인종, 언어, 종교 등 과거에 인류를 나누던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음. 열린 마음과 세계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꿈을 이루고 더욱 큰 세상에서 빛날 것임. 세계가 하나 되고 인류가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 또한 이 정신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람.



협력 및 참여사업

경기초등학교 기후환경 성금 전달식 01/05

경기초등학교는 반기문재단에 전교생이 교내 친환경 실천 활동을 통해 모금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함. 성금 속에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의 달성에 힘써달라는 미래 세대의 간절함이 담겨있음. 경기초등학교가 기후 환경 활동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도 큰 울림을 남겨주기를 기대함.



Yale Model United Nations 기초연설 01/18-01/21

예일모의유엔총회의 50주년을 축하하며, 참가자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치 및 기업 지도자들에게 도전할 것을 응원함.



2024 GEMS World Academy - Dubai Model UN (GWAMUN) 개최식 축하 03/08-03/10

현재 세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분쟁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 여러분이 미래의 리더이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주역임. 경쟁이 아닌 협동심을 발휘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며 행동해야 함. 소속된 단체, 국가, 지역을 넘어 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열정과 온정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램.



한경국립대학교 특강 04/1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구의 미래 주인인 청년 학생들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거대한 도전의 선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함. 21세기의 대한민국 청년은 열정·용기·도전을 무기로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세대가 되어야 함. 한경국립대학교의 가족 모두가 합심하고 단합하여 일취월장의 발전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하고 성원함.



이화여자대학교 Fireside Chat on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좌담회 04/16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여성 인력의 완전한 활용이 필요함. 세계가 직면한 큰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임. 젊은 세대가 세계시민의식과 타인에 대한 온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함.



광운학원 창립 90주년 기념식 축하 05/20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창립 9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34년,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조광운 선생께서 설립한 광운학원은 민족의 자립을 목표로 과학기술 교육을 시작해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문기관으로 자리잡음. 자아 발견과 인격 도야라는 설립자의 교육 이념은 여전히 중심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길 기대함.



글로벌어린이재단 활동 평가회 축하 05/20

어린이 권리와 복지를 위해 헌신을 하는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함. 불평등, 교육 부족, 건강 문제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는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임. 재단이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길 기원함.



서울외국인학교 강연 06/03

'UN SDGs, Climate Change, and Global Citizenship'

기후 변화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 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이 필수적임.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핵심이며, 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함.



한국 다양성 협의체 발족 축하 06/18

한국 다양성 협의체 발족을 축하드리며, 이는 차이를 존중하고 관용적인 사회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음.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 06/26

'Children and Armed Conflict Open Debate'

약 2억 3천만 명의 어린이가 무장 분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중 최대 1,500만 명이 무력 충돌과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이러한 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와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절실하며,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아동 권리와 복지를 우선시하고 성폭력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함.



제29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기초연설 07/02-07/05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과 다자주의적 공조는 기후 위기, 공중보건 위기,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함. 이번 모의유엔회의를 통해 유엔의 3대 목표인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글로벌 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되길 바램.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대학생 멘토링팀 재단방문 08/13

청년들은 열정과 온정으로, 미래를 향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램. 앞으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계에 진출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임. 따라서,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비전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Youth Academy on Climate Adaptation and Leadership **축사** 09/19-09/26

세계는 기후 위기와 양질의 교육 부족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 양질의 교육은 회복력 있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핵심 해결책이며, 다음 세대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이제는 교육에 투자하여 젊은 세대를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켜야 할 때임.



Women at the Nexus of Climate, Conflict and Peacebuilding 축사 11/06

여성들은 기후 변화 대응, 갈등 해결, 평화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그동안 진행해온 여성 권리 증진에 대한 노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QS Higher Ed Summit: Asia Pacific 2024 **축사** 11/06

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전을 위한 촉매제로서, 포괄적 성장, 평등, 기후 행동,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특히, 대학은 우수한 교육 제공과 인재 양성, 연구 역량 강화, 그리고 문화·지역·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및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024 UN청소년환경총회 폐회사 11/16-11/17

인공지능(AI)과 e-스포츠는 창의적인 기후 위기 대응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청소년 여러분이 글로벌 협력과 세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기대함.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Raise your voice, challenge your leaders”라는 리더십 정신을 되새기며,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당부드림.



제8회 Next Intelligence Forum 강연 11/28

‘지속가능한 미래와 청년의 역할’

고려대는 SDSN 한국사무국 운영 등 유엔과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왔음.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이기도 함.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상에서 자원 절약을 실천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높여갈 바람.



영상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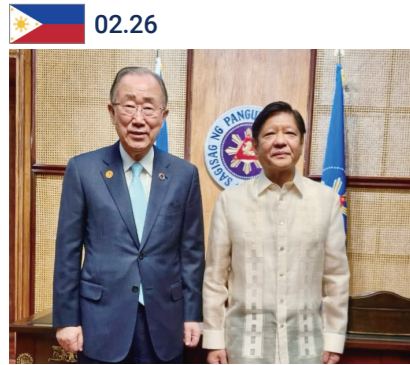
Youth Climate Adaptation Action Day, 2024
Elevating the Voices of Women in Agriculture
(EVWA) Champion Documentary 영상 메시지
등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06

부록

재단 방문 및 면담 주요 해외 인사	64
반기문재단 기금 및 사용 내역	66
주요 해외 언론 활동	68

재단 방문 및 면담 주요 해외 인사



02.26

Ferdinand R.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04.08

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04.18

Delia Domingo Albert
(전 필리핀 외교장관)



05.22

Zhang Jun
(보아오포럼 사무총장)



06.05

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



06.05

Ahmed Attaf
(알제리 외교장관)



06.27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



07.09

Emmy Jerono Kipsoi
(주한 케냐 대사)



08.22

Zenani Mandela Dlamini
(주한 남아공 대사)



09.09

Baiba Braže
(라트비아 외교장관)



09.11

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



10.15

Koichi Mizushima
(주한 일본 대사)



10.16

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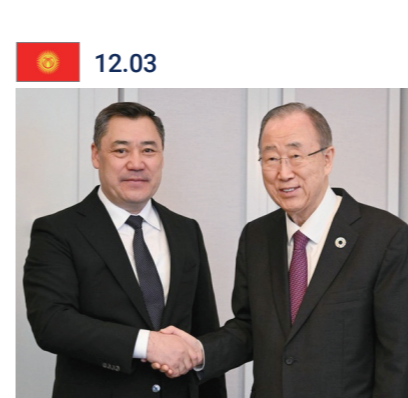
10.23

Dagmar Schmidt Tartagli
(주한 스위스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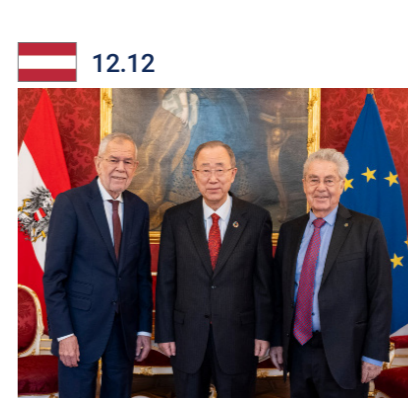
11.06

Eva Herzog
(스위스 상원의장)



12.03

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12.12

Alexander Van der Bellen
(오스트리아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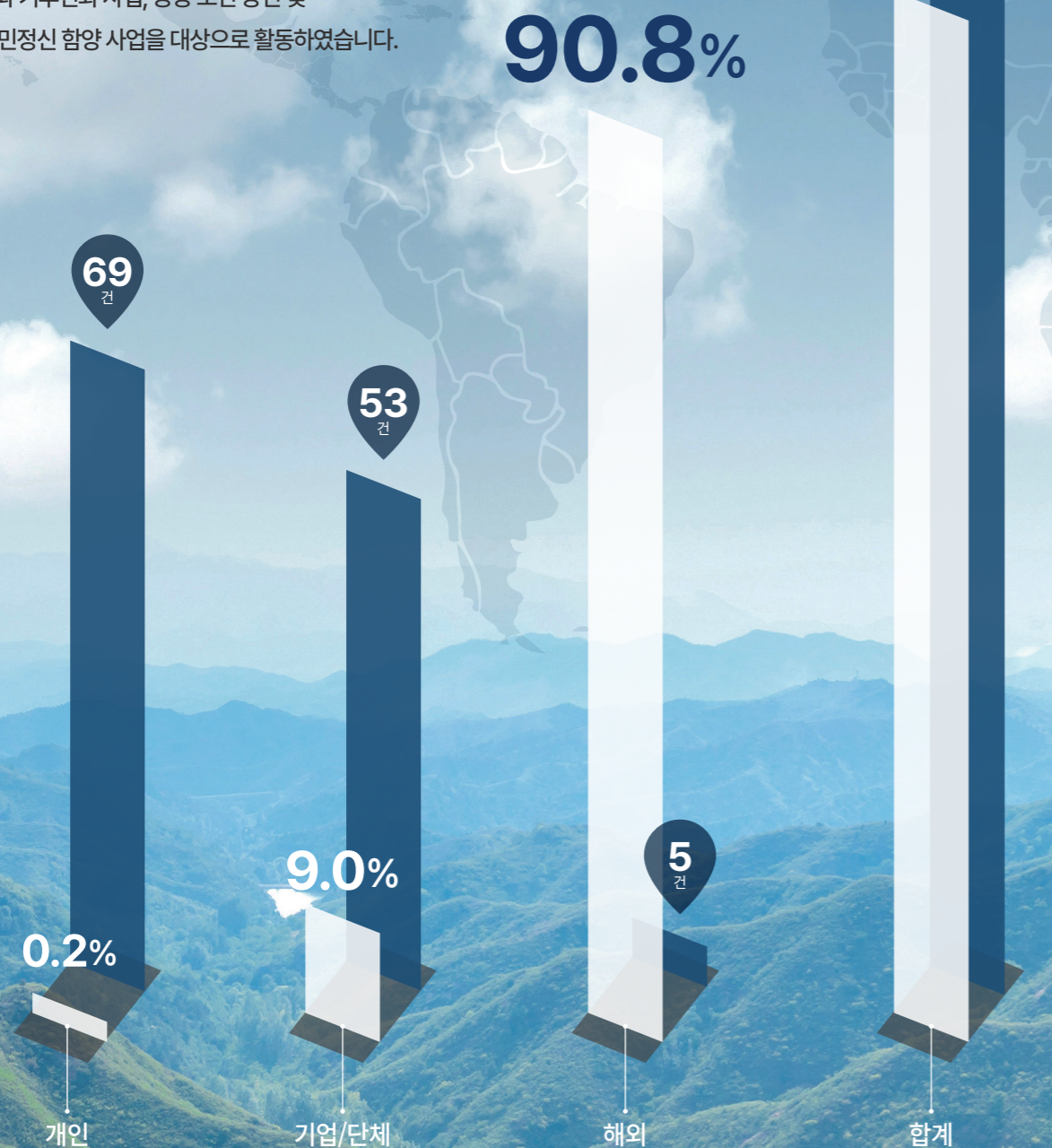
12.12

Alexander Schallenberg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반기문재단 기금 및 사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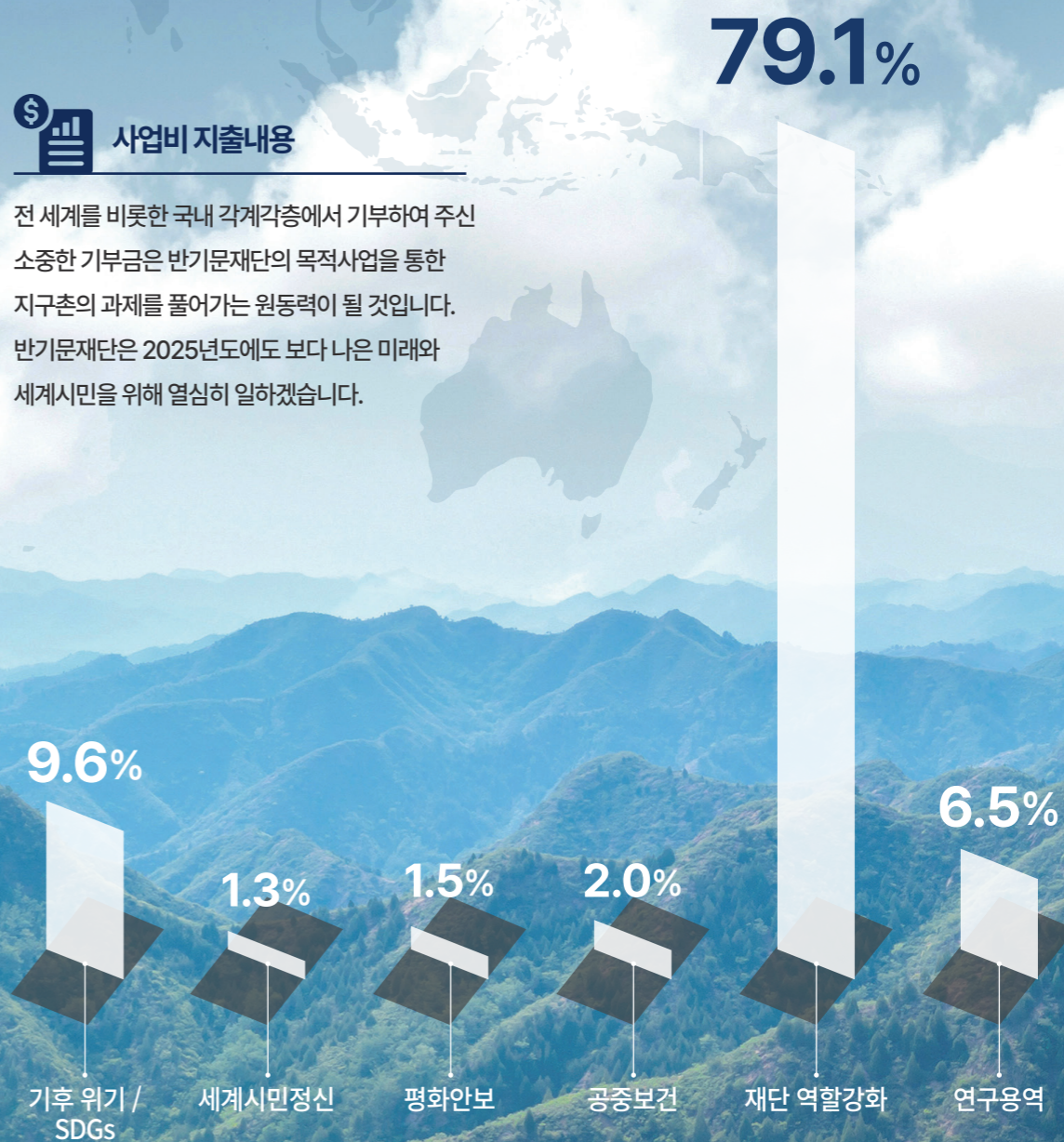
기관별 기부금내역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재단 역할강화 사업,
SDGs와 기후변화 사업, 공중 보건 증진 및
세계시민정신 함양 사업을 대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용

전 세계를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에서 기부하여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반기문재단의 목적사업을 통한
지구촌의 과제를 풀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기문재단은 2025년도에도 보다 나은 미래와
세계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건수
■ 비율

주요 해외 언론 활동

FP

2024-09-20

Billionaires Must Help Fix the Planet

It's time for the ultra-rich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role in the climate crisis.

By **Ban Ki-moon**, a former U.N. secretary-general and an honorary member of Club de Madrid.

The climate crisis is a ticking time bomb, and those with the greatest power, wealth, and influenc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role in it. While millions of the world's most marginalized people are paying the ultimate price with their lives, their homes, or their livelihoods, billionaires and fossil fuel giants continue to profit. The time has come to hold decision-makers and the wealthiest accountable.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os have become increasingly frequent and devastating. Recent droughts in Ethiopia, Kenya, and Somalia, for instance, have caused millions of people who live in poverty in rural areas to lose their main economic asset: their livestock. Between 2021 and 2023, nearly 13 million

livestock worth around \$7.4 billion died in those countries. The people bearing the brunt of these impacts contributed little to the problem, while major fossil fuel corporations have continued to pollute with impunity, reaping enormous profits, paying far too little in taxes, and using their influence to shape policies in their favor.

The coming months are critical. World leaders are gearing up for the United Nations Summit of the Future and Climate Week in New York next week, with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Azerbaijan (known as COP29) looming in November. These are the meetings where the big decisions will be made—determining how much the global north is willing to

help the global south transition to clean energy mechanisms, shield itself from environmental devastation, and repair damage already caused by climate change. This will require trillions of dollars, but so far, there is no agreement on where that money will come from.

Let's be clear: The wealthiest 1 percent—predominantly men—are responsible for as much carbon pollution as the poorest two-thirds of humanity, according to Oxfam. Billionaires, through their investments, produce 1 million times more emissions than the average person. Yet, when it comes to fixing the climate catastrophe, the burden seems to fall on everyone except those who hold the power and resources to make meaningful changes. On average, G-20 members collect only 7.6 percent of their tax revenue through wealth taxes, compared with 32.3 percent from taxes on goods and services, which shifts more of the tax burden on lower-income households. In countries such as Brazil, France, Ital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ultra-rich have lower effective tax rates than the average worker.

The current approach—where regular taxpayers shoulder the billions of dollars needed to address the harms caused by climate breakdown and subsidize the costs of building new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is both unfair and unsustainable. Even more troubling, governments continue to use taxpayer funds to provide massive subsidies for fossil fuel production. In 2023 alone, the world invested more than \$1 trillion in fossil fuel infrastructure. Corporations have doubled down on dirty energy, prioritizing profits over people and the planet. Oil and gas corporations spend only about 2.5 percent of their capital on clean energy technologies.

Governments need to implement fairer tax policies that ensure the richest polluters pay their due and then use this revenue to invest heavily in a clean energy transition and public services. With wealthier countries leading by example, these taxes should place the primary burden on the ultra-rich, not on middle- and low-income communities.

There are plenty of ways to do this, but a few stand out. First, countries need to make sure the ultra-rich pay greater income and wealth taxes. In high-income countries, a modest wealth tax alone could generate more than \$1.2 trillion a year. Highly progressive taxes on income, capital gains, property, and inheritance would raise even more mone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t the G-20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July,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agreed to cooperate to tax the ultra-rich. At the G-20 summit in November, they must go further and settle on a specific standard that taxes the ultra-rich at a high enough rate to ensure they are equitably contributing to public budgets and combating the growing crisis of economic inequality.

Second, governments must put in place permanent taxes on the profits of fossil fuel corporations and other major polluters based or operating in their countries—as well as on their shareholder payouts. The 21 biggest fossil fuel companies are expected to cause climate harms between 2025 and 2050 that will cost \$5.4 trillion. Meanwhile, in 2021 and 2022, just 45 energy corporations raked in on average \$237 billion a year. A tax on fossil fuel profits would generate resources and incentivize greater investment in clean energy.

Third, while governments take action to implement these taxes domestically, they must also advocate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at COP29 and other U.N. forums to coordinate on taxation on polluters and meet the global south's need for climate and development finance. Taxes on the wealthiest polluters and redirection of investments into green initiatives are not only logical—they are essential. The world urgently needs trillions of dollars to protect people from climate disasters and overhaul energy systems from top to bottom to prevent further climate catastrophe.

In addition to taxes, it is crucial for governments to focus on domestic fiscal reforms that fund sustainable energy alternatives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This will require prioritizing cities with the highest pollution indices, promoting urban resilience, and generating green jobs. Simultaneously, governments should account for the impact of these changes on the general population. As nations seek to implement these reforms, they should take care to address existing inequalities. The voices of marginalized groups,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youth, women, and children, must be included in decision-making that affects their communities.

The clock is ticking, and the time for excuses is over. The choice is clear: Either we ensure that the wealthiest contribute their fair share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or we all face a future where the consequences of inaction will be devastating.



The coal-fired Soma power plant in Manisa, western Turkey, on Aug. 15, 2023. Bulent Kilic/AFP via Getty Images



Deadly Hurricanes Should Put Climate Front and Center in Election | Opinion

By **Ban Ki-moon and Patrick Verkooijen**
8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CEO of the Global Center on Adaptation

Climate change has again unleashed its destructive force on America, smack in the middle of election season. Higher temperatures and warmer seas, two well-known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re what gave Hurricane Milton its deadly energy and record rainfall, according to initial scientific assessments. Yet even as troops are dispatched to aid devastated communities, the issue of climate change barely features in the campaign of either presidential candidate. It's not a burning issue for many voters either, according to polls last month.

With the presidential hopefuls running neck-and-neck,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y should want to avoid subjects perceived as vote losers. Regrettably—and wrongly, in our view—in the U.S. climate policy is thought of as a minefield; best avoided altogether or approached with great caution.

Partly this is because it's presented as a difficult and complex subject, requiring both personal and national sacrifices. This negative framing is what prevents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from trumpeting the tens of thousands of clean-energy jobs created under the 2022 Inflation Reduction Act, President Joe Biden's signature green legislation. And it is what allows Donald Trump, the former president, to accuse Washington of a "green new scam," even though Republican districts have been the main beneficiaries of new cleantech investment since 2022.

Climate change should not be a partisan issue. It affects everyone, regardless of political affiliation, and will shape the lives of Americans for generations to come. Both presidential candidates need to place it at the heart of U.S. politics, where it belongs.

Taking climate out of the culture wars

One way to depoliticize climate change is to focus on local impacts and community resilience. Americans excel at coming together and helping each other after disasters like Hurricane Milton. We see no reason why politicians should not be able to do the same. Climate change should be a unifying issue, framed around renewing the country's crumbling infrastructure and protecting homes, jobs, local economies—and the life its people love. Americans deserve more than hopes and prayers.

By supporting adaptation strategies that protect vulnerable communities—climate-proofing power grids, strengthening flood defenses for coastal and riverine settlements, and reforestation to stabilize soils and prevent landslides—the parties could build common ground around the safety, security, and prosperity of all Americans, whether in urban areas or rural, red states or blue. Adaptation projects generate jobs, enhance productivity, and reduce future economic losses and the need for disaster relief. Studies show that as a result, climate adaptation delivers economic returns several times higher than the initial investment.

But climate action isn't just about avoiding disaster—it's about seizing a once-in-a-generation chance to come together around a new goal: building an America fit for the 21st century. It must be championed as a pathway to economic opportunity—indeed, the only pathway—rather than as a burden. In fairness to Biden, this was exactly how he fram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accompanying regulation to rein in carbon emissions. He deserves credit for spearheading a manufacturing renaissance in America that has attracted more than \$200 billion in new cleantech investment to date.



This aerial picture taken on Oct.11, shows a destroyed home in the aftermath of Hurricane Milton in Port St Lucie, Florida.
MIGUEL J. RODRIGUEZ CARRILLO/AFP /AFP via Getty Images

Doubling down on climate investment

Come January, the United States will have a new president. We hope the new leader will build on Biden's green policies, rather than renege on them. Climate change is here to stay; its impact is becoming more and more lethal, touching more and more lives. To fight it we need long-term, consistent, and decisive action. The new government will need to redouble climate investment—accelerating deployment of clean technologies and training for green jobs and ensuring that climate action benefits town and country dwellers alike. Financial markets also need to better integrate climate risk—creating incentives for private capital to flow toward sustainable, climate-resilient investments.

Whoever wins the White House, this is a time for pragmatism and unity, not partisanship. Failing to build climate resilience will only mean higher costs for Americans down the road. In these tumultuous times, America—and the world—needs a strong climate leader. We hope the next president will be up to the task.

Ban Ki-moon was eigh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Patrick Verkooijen is CEO of the Global Center on Adaptation.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writer's own.

We can prepare for hurricanes, heatwaves and flooding – but only if we are bold at Cop29



Ban Ki-moon

The right funding now can protect the frontlines of the climate crisis from the worst effects of extreme weather events



Women in Limpopo province, South Africa apply agroecology methods to develop smallholdings in the fight against food insecurity. Photograph: Lucas Ledwaba/Alamy

As we approach Cop29 in Baku, world leaders are due to set a new climate finance goal – a sum set aside to help poor countries cut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dapt to the effects of the climate crisis. Their negotiations take place against a backdrop of increasingly severe weather events. This year alone, we have witnessed deadly heatwaves across north Africa, Mexico, India and Saudi Arabia; a historic drought across southern Africa; catastrophic wildfires in the Brazilian Pantanal wetlands; record-breaking hurricanes in the Caribbean and the US; and plenty more. The climate emergency knows no borders and spares no one.

These events serve as stark reminders of the pressing need for world leaders and all of us to protect vulnerable communities on the frontline of the climate crisis.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in Africa, the cost of climate impacts is staggering. African nations are losing up to 5% of their GDP because of climate extremes, while some are diverting as much as 9% of their national budgets to overcome the fallout from them. The latest report by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estimates that Africa south of the Sahara alone will need \$30bn-\$50bn annually over the next decade just to meet the costs of protecting communities facing unprecedented climate-related disasters. We will not be able to reduce poverty, eliminate hunger and build a prosperous and resilient global community without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The scale of this financial burden is overwhelming. About \$89.6bn was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in 2021, according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Yet global climate finance remains disproportionately focused on mitigation. About 90% of climate finance goes towards reducing emissions rather than supporting countries to prepare and build resilience to the impacts of the climate crisis. This presents a significant challenge, particularly for developing nations that are already bearing the brunt of crippling debt. I urge world leaders to tip the balanc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finance, ensuring both are adequately funded.

Tipping the balance means increasing grant-based public finance for adaptation to match the scale of the challenge. This must be a core element of the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being negotiated at Cop29, in which adaptation finance will be recognised as a separate, equal priority. Expanding adaptation finance ensures a fairer distribution of

resources to protect communities already experiencing the devastating effects of the climate crisis.

The focus on adaptation finance at Cop29 must be bold and transformative. The stakes are too high for incremental change. The Cop29 presidency's appointment of a ministerial pair (from Ireland and Costa Rica) for adaptation, who will lead consultations and bilateral discussions leading up to the event, is a positive signal of the importance placed on adaptation within the NCQG negotiations.

At Cop29, leaders must pledge ambitious actions to increase public adaptation finance, treating it as a priority distinct from mitigation and loss and damage. These pledges must be grounded in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es to ensure better access for the most vulnerable. Only by doing so can we hope to narrow the adaptation gap and move closer to achieving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 – part of 2015's Paris framework that aims to reduce vulnerability to climate breakdown.

Agricultural adaptation, in particular, is critical for addressing the escalating challenges posed by the climate crisis. During my tenure as UN secretary general and in my current leadership roles, this has been my top priority. At Cop29, I urge world leaders to pledge substantial support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to foster the innovation necessary for addressing these challenges. Investing in agricultural R&D is essential for developing climate-resilient crops, sustainable farming practices, and improved water and soil management techniques. Supporting agricultural R&D will not only boost productivity and enhance resilience, but will also contribute to a more stable and secure global food system for future generations.

Cop29 offers an opportunity for a new era of climate leadership – one that prioritises those on the frontlines. I encourage leaders to bring bold pledges to the table that reflect the scale of the challenge. This means simplifying processes, increasing access to financing for vulnerable nations and ensuring that adaptation is treated as an equal priority to mitigation and loss and damage.

Now is the time for world leaders to show real global leadership. The question remains: will we rise to meet this challenge?

Open Letter on COP reform to All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Mr. Simon Stiell, Executive Secretary of the UNFCCC Secretariat and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Excellencies,

We, the undersigned, write today to reiterate and update the call for COP reform, which was first conveyed in our open letter to the UNFCCC Secretariat, dated February 23, 2023.

We recognise the important diplomatic milestones of the past 28 years of climate negotiations. A remarkable consensus has been achieved with over 195 countries having agreed to strive to hold global warming to 1.5°C. We also recognise the key role of the UNFCCC Secretariat in helping to bring all 195 countries along the steps necessary to establish the global policy framework, which is underpinned by the Paris Agreement and its subsequent COP decisions.

Beyond the Paris goals, countries have now agreed to phase out fossil fuels, end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stop deforestation by 2030, operationalise carbon trading globally, and most have joined the Global Methane Pledge. Governments have pledged \$100 billion annually to the Green Climate Fund, and the Loss and Damage Fund is officially established.

Despite some of its flaws, and limited resources, the global policy framework is scientifically rigorous and economically sound and complete. But the framework alone is not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Global emissions continue to increase, carbon sinks are being degraded and we can no longer exclude the possibility of surpassing 2.9°C of warming by 2100. Our first encounter with 1.5°C was accompanied by unprecedented human impacts coupled with enormous climate costs running into the hundreds of billions in 2023. Science tells us that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must be reduced by 7.5% annually to have any chance of staying within the 1.5°C threshold, a

prerequisite for the stability of our planet and a livable future for much of humanity. In 2024, the task is unequivoc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must be reduced by 4 billion tonnes.

28 COPs have delivered us with the policy framework to achieve this. However, its current structure simply cannot deliver the change at exponential speed and scale, which is essential to ensure a safe climate landing for humanity. This is what compels our call for a fundamental overhaul of the COP. We need a shift from negotiation to implementation, enabling the COP to deliver on agreed commitments and ensure the urgent energy transition and phase-out of fossil energy.

We outline below our suggested measures for reform:

1. Improve the selection process for COP presidencies

We need strict eligibility criteria to exclude countries who do not support the phase out/transition away from fossil energy. Host countries must demonstrate their high level of ambition to uphold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2. Streamline for speed and scale

With the global policy map fully developed, COP must shift away from negotiations to the delivery of concrete action. COP meetings must be transformed into smaller, more frequent, solution-driven meetings where countries report on progress, are held accountable in line with the latest science, and discuss important solutions for finance, technology and equity. This work must be supplemented by the benchmarking of national progress using the UN Gap Reports. This approach will accelerate action and allow for timely adjustments based on emerging scientific findings and changing global circumstances.

3. Improve implementation and accountability

The COP process must be strengthened with mechanisms to hold countries accountable for their climate targets and commitments. Whilst the Paris framework was intended to operate in “delivery mode”, it is not working because governments are not held to account to ensure that national action plans align with the latest scientific evidence. The Global Stocktake process is an important start but it must be strengthened with enhanced reporting and benchmarking, rigorous peer-review processes, independent scientific oversight and transparent tracking of pledges and action.

4. Ensure robust tracking of climate financing

A growing proportion of climate financing pledges are now being disbursed as interest-bearing loans, thereby exacerbating the debt burden for climate vulnerable nations. We need standardised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what qualifies as climate finance, along with common reporting frameworks and tracking mechanisms to verify climate financing flows. All of these measures are critical for rebuilding trust and accountability and for mobilising the necessary resources.

5. Amplify the voice of authoritative science

Whilst the climate COP does rely on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and other related bodies, such as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it does not have its own permanent scientific advisory body that is formally part of the COP structure. We share growing concerns that climate COPs do not sufficiently integrate or action up the latest scientific evidence. The CBD COP has its own permanent scientific advisory body, which has provided a technical and scientific underpinning for the CBD. And the same could be replicated within the climate COP.

6. Recognise the interdependencies between poverty, inequality and planetary instability

New research from the Earth Commission and from Earth4All affirms the important linkages between ecological and social change processes. If the climate COP is to be more impactful, it must acknowledge that the current rate of nature loss (e.g. freshwater scarcity, land and soil degradation, pollination decline, ocean pollution) is affecting the stability of the planet.

Moreover, planetary stability, now at grave risk, is impossible without decisive action on equality, justice and poverty alleviation. This is why we call for a Climate-Poverty Policy Envoy to ensure that these critical links are anchored in the negotiations and implementation actions, especially through dedicated spaces for vulnerable communities to advocate for these linkages.

7. Enhance equitable representation

Despite the climate COP’s new disclosure rules, a record number of 2,456 fossil fuel lobbyists were granted access at COP28, nearly four times more than COP27. The fact that there were far more fossil fuel lobbyists than official representatives from scientific institutions, Indigenous communities and vulnerable nations reflects a systemic imbalance in COP representation. Improving the management of corporate interests within COPs proceedings will require stronger transparency and disclosure rules and clear guidelines that require companies to demonstrate alignment between their climate commitments, business model and lobbying activities.

In closing, let us reiterate the important role the UNFCCC has played and will continue to play in ensuring ambition on climate change. There is no doubt that climate change is a global challenge and must be solved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longside ambition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e Paris agreement and subsequent COP decisions have laid a robust foundation for the global policy framework on climate action. Now, we must work together with urgency and purpose, transforming the climate COP so that it can take strategic, action-oriented and accountable decisions to deliver the scale of ambition commensurate with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

SIGNATORIES

Sandrine Dixson-Declève, Executive Chair, Earth4All and Global Ambassador for the Club of Rome

Prof. Dr. Johan Rockström, Director of the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Action Research

Ban Ki-moon,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ry Robinson, Former President of Ireland

Christiana Figueres, Former Executive Secretary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nie Hedegaard, Chair of the Board for the KR Foundation and former EU Former EU Commissioner for Climate Action

Dr. Carlos Nobre, Member of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of the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 the Rockefeller Foundation Economic Council on Planetary Health

Dr. Hans Joachim Schellnhuber,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Dr. Bertrand Piccard, President, Solar Impulse Foundation Esmeralda of Belgium, President of the Leopold III Fund for Nature Exploration and Conservation

Maria João Rodrigues, President,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Youba Sokona, Chair, African Institute for Sustainable Energy and System Analysis and former Vice-Chair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Jayati Ghosh,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Dr. Arunabha Ghosh, CEO, Council on Energy, Environment and Water

Sharan Burrow, former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Phyllis Cuttino, President and CEO, The Climate Reality Project
Ilona Szabó de Carvalho, Co-founder and President, Igarapé Institute

Eva Zabey, Executive-Director, Business for Nature

Sheela Patel, Director, Society for Promotion of Area Resource Centres and Global Ambassador for the Race to Zero and Race to Resilience

Dr. Gunhild A. Stordalen, Co-founder and Executive Chair, EAT
Marie-Claire Graf, Co-Founder, Youth Negotiators Academy & YOUNGO Focal Point COP26

Paul Shrivastava, Co-President, The Club of Rome

Statement: More than a year since the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began, there is no end in sight. Israel is conducting one of the deadliest and most destructive military campaigns in recent history, with massive US support. Yet Hamas maintains influence in Gaza, the war has escalated regionally, and Israel is no safer.

Civilians are paying an intolerable price. We are witnessing an unprecedented level of human suffering in Gaza that will only breed more desperation and more violence.

The siege in northern Gaza is putting the remaining population there at risk of an “imminent and substantial likelihood of famine”, as warned by the independent Famine Review Committee.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We urge Israel to end its aggression and Hamas to release the remaining hostages, whose continuing detention we condemn. Only negotiation can end this war.

President Biden's attempts to restrain Israel have not worked. He has chosen not to deploy all the leverage at his disposal. His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supplying offensive weapons when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that Israel is persistently viola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contravention of US law and policy.

President Biden must finally do the right thing: stop transferring weapons to Israel.

Israel's actions point to ethnic cleansing and a deliberate effort to redraw the map by creating buffer zones, forcibly displacing Palestinian inhabitants, and rendering large swathes of territory uninhabitable.

It is for an international court to decide whether Israel's acts constitute genocide. States must not wait for a final determination. Acting now to prevent genocide is their legal obligation.

We welcome the issuing of arrest warrants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t is right that the leaders of Israel and Hama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ll member states are legally obliged to assist the ICC with any requests for arrest and surrender.

Those arming the warring parties in the knowledge that atrocity crimes are being committed are also implicated.

Ending the conflict requires not more weapons, but an end to impunity, and a plan for peace that moves us toward a two-state solution. Regrettably, this week the Biden administration vetoed a four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demanding a ceasefire in

Gaza (just a day after Russia was rightly condemned for rejecting a similar resolution on Sudan). The USA is isolated in the Security Council on the conflict in Gaza.

We commend the steps taken by the USA, UK, Canada and other states to tackle extremist settler violence in the West Bank by imposing targeted sanctions. Such sanctions must now target those in the Government of Israel who are pursuing ethnic cleansing and annexation.

Sanctions should also continue to be imposed against Hamas and other armed groups indiscriminately attacking Israeli civilians.

Recognition of the State of Palestine is a vital step towards a two-state solution that should not depend on peace negotiations. The UK, France and all other countries should recognise Palestine without delay, if they have not already done so. The USA should not veto the Security Council recommending full Palestinian membership of the UN.

We know from our own experience as former leaders that the final days in office can bring moments of deep reflection. President Biden has the opportunity now to find the courage to take bold and just decisions.

ENDS

Juan Manuel Santos, former President of Colombia, Nobel Peace Laureate and Chair of The Elders

Ban Ki-moon, former UN Secretary-General and Deputy Chair of The Elders

Graça Machel, Founder of the Graça Machel Trust, Co-founder and Deputy Chair of The Elders

Gro Harlem Brundtland, former Prime Minister of Norway and former Director-General of the WHO

Helen Clark, former Prime Minister of New Zealand and former head of the UN Development Programme

Elbegdorj Tsakhia, former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of Mongolia

Zeid Ra'ad Al Hussein, former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ina Jilani,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Pakistan and co-chair of the Taskforce on Justice

Ellen Johnson Sirleaf, former President of Liberia and Nobel Peace Laureate

Denis Mukwege, physician and human rights advocate, Nobel Peace Laureate

Mary Robinson, former President of Ireland and former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rnesto Zedillo, former President of Mexico



2024-11-22

Gaza is a stain on the world's conscience. President Biden can still change course.



Photo: Anas Mohammed / Shutterstock

The Miwon Prize gives fresh impetus, validation and responsibility to The Elders' mission



Photo: Ralph Alswang

The Elders were recently awarded the Miwon Peace Prize for their unwavering commitment to promoting peace, justice, and human rights worldwide. Ban Ki-moon, Deputy Chair of The Elders and former UN Secretary-General, accepted the award on their behalf.

Read his full remarks below.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tremendous honour and privilege to be here tonight to accept this inaugural Miwon Peace Prize on behalf of The Elders.

Despite our name, The Elders is a relatively young organisation. We were founded 17 years ago by Nelson Mandela, so perhaps you could say we are now in our adolescent stage.

It feels appropriate therefore that our relatively new organisation is the first recipient of this entirely new prize.

As a Korean, it gives me great pride to see the deep affinities between the mission and values of The Elders and the philosophy of Miwon developed by Dr. Young Seek Choue.

The world envisioned by Miwon transcends the divisions imposed by ideologies and politics, seeking a new horizon of global governance where human dignity and universal values

are paramount.

The founder of The Elders, Nelson Mandela, fought courageously for many decades and at great personal sacrifice to overcome racial discrimination in apartheid South Africa and champion the values of the universal human rights.

Nelson Mandela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for his remarkable accomplishments in South Africa, but his profound sense of solidarity and human empathy meant his influence was felt far beyond his country's borders.

He worked for peace across Africa, stood in suppor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and campaigned for the victims of HIV/AIDS and other marginalised groups across the world.

This belief in equality and justice inspired him to found The Elders in 2007, on the occasion of his 89th birthday.

I had the honour of joining The Elders ten years later, in 2017, after I had stepped down a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 was inspired then, and remain inspired today, by the words Nelson Mandela spoke at the first public convening of The Elders, in Johannesburg in July 2007:

"This group derives its strength not from political, economic or military power, but from the independence and integrity of those who are here.

They do not have careers to build, elections to win, constituencies to please. They can talk to anyone they please, and are free to follow paths they deem right, even if hugely unpopular.

They will support courage where there is fear, foster agreement where there is conflict and inspire hope where there is despair."

Although the world has changed dramatically since Mandela founded The Elders, and even more so since Miwon first developed his philosophy, I believe that their shared commitment to peace and human rights for all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e awarding of the inaugural Miwon Peace Prize to The Elders will help take the messages of both of our organisations and their founders to a wider global audience.

These messages need to be heard more than ever today, as our world is confronted by violent conflicts, deepening polarisation and geopolitical rivalry, and declining respect for the rule of law and the institutions created to preserve and promote peace.

We are witnessing a global explosion of conflicts, atrocity crimes and impunity, from Gaza to Ukraine, Sudan to Myanmar and countless other countries.

The foundations of the post-1945 international order are rotting through neglect, complacency and sabotage. The dysfunction and double standards we see as a result is exacerbating the profound lack of trust between countries, and a rise in violent conflicts.

This increasing chaos stems from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over many years, and paralysis within the decision-making bodies charged with preventing and resolving conflicts.

The pursuit of national objectives by military means rather than diplomacy is precisely the opposite of what the architects of the United Nations intended, and what most people in the world still want, which is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The failure of states to uphold their responsibilities has created a vacuum which geopolitical rivalry and bellicose confrontation is filling.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 must shoulder a significant amount of the blame for this abdication of global leadership.

Repeated vetoes on the Security Council are an abuse of the position of permanent members, which is increasingly questioned in a multipolar world where other countries are playing a more constructive role.

As a former UN Secretary-General, it pains me to observe that the current system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 is patently ineffective. It is failing to perform its most fundamental function: upholding peace and security, and protecting innocent lives.

There is perhaps no greater indictment of this failure than the

growing number of children killed and impacted by armed conflict.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report by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grave violations against children rose 21 percent in 2023, with a 35 percent rise in the killing and maiming of children in the same period.

This reflects a persistent and blatant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by those perpetrating these violations, whether government forces or non-state armed actors, and a sense of impunity that they will not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There should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commit crimes against children anywhere in the world, whether they be states or armed groups, in autocracies or democracies. Such distinctions mean nothing to the parents of murdered children, nor should they to the institutions charged with upholding international justice.

I know from my own experience that the trauma experienced by children in armed conflict cannot be captured in figures alone.

As a young boy during the Korean War, I experienced the trauma and wrenching displacement of fleeing my home during the conflict, with death and destruction all around me. The human suffering I witnessed as I fled my burning village with my parents continued to haunt me in the days and years to come.

No child should endure what I did as a boy, and what countless other boys and girls still do today, from Gaza, Lebanon and Israel to Ukraine, Sudan to Myanmar,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o Yemen and beyond.

As someone who has championed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throughout my life and particularly as UN Secretary-General, I am hugely concerned at the continuously high levels of sexual violence against girls in conflicts worldwide.

These violations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not only for survivors,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but also for those children born of sexual violence who deserve special recognition and support.

All of us need to ask hard questions of our leaders as to how this state of affairs can continue in this day and age.

The case for reform is beyond doubt.

And indeed,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a renewed urgency to long-standing efforts to reform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culminated in a commitment at the Summit of the Future in September to enlarge the Council to reflect the world of today, not that of 1945, while ensuring a balance between representativeness and effectiveness.

The veto remains the core problem in the working methods of the Council, and new, indefinite, permanent members with veto privileges would only increase ineffectiveness and repeat the founding flaw of the Council.

The Elders are instead calling for a new category of longer term, re-electable membership on a regional basis, as some models have proposed. This would create positive and democratic incentives for longer term presence on the Council.

We welcome the commitment in the Pact for the Future to develop a consolidated model that balances these issues. A coalition of member states should drive a process that puts such a model to the General Assembly for its approval.

In the only successful reform of to date, Council expansion in the 1960s, it was the General Assembly, not the Security Council that led the process. In that reform,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Council eventually followed the global consensus, so we should not seek or wait for permission from them today.

This impasse is unforgivable when all of humanity is confronted with existential threats – the climate and nature crisis, pandemics, nuclear weapons and unregulated Artificial Intelligence – that can only be addressed by countries defusing these geopolitical tensions and working together.

Next year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As a former Secretary-General, and as someone who celebrated my own 80th birthday this year, I view this as a landmark moment in world history.

Throughout my life, I have been a determined champion of multilateralism. In essence, this word represents collaboration, inclusion and solidarity. It asks us to look beyond state interests and recognise that we are all part of a shared,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my time as Secretary-General, I witnessed important victories for diplomacy and global justice when countries came together, despite their differences, to work towards

common goals.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oth agreed in 2015, represent two historic achievements that continue to shape policy decisions today.

But there can be no grounds for complacency in tackling the climate and nature crisis. It demands concerted, collective action that recognises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intersections of injustice.

We share one solitary, fragile planet. We will all suffer the consequences of inaction. Yet political and business leaders struggle to put aside individual interests and act together. Even as climate and nature impacts grow ever more apparent, some people are actively turning against the actions needed to reduce risks. How can we break through this impasse?

I believe that the way forward starts with recognising that the search for justice is fundamental to our human condition. This includes justice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opportunity, justice in access to decision-making, and justice in holding to account those who did most to cause the climate crisis, and the multiple conflicts that scar our world.

Multilateralism remains our greatest hope for averting catastrophe, safeguarding our collective future and delivering the just outcomes the world needs. This is why securing a functioning and effective rules-based multilateral system must be a priority for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We must remember that the UN was created after the devast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horrors of the Holocaust, by men and women determined to say “Never Again” to the barbarism they had experienced.

We must not give up on the multilateral frameworks that represent our greatest achievements, nor on the values enshrined in the UN Charter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ere necessary, we must enhance and reconfigure these frameworks to address our greatest contemporary threats. The energy and enthusiasm of youth is vital to this, and is a critical counterpoint to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older generations.

But looking at the state of the world today, I must say with regret that we are far from Miwon’s vision of peaceful cooperation for the common good.

The outcomes of the recent G20 summit in Rio de Janeiro in Brazil, and the COP29 climate conference in Baku, Azerbaijan,

show that leaders are still not acting with sufficient urgency, ambition or coordination.

The \$300 billion per year committed by 2035 by rich countries at COP29 falls short of the amount needed to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This is nowhere near enough to support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not caused the climate crisis yet are experiencing its worst impacts.

COP29 was also weak on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which remains critical to any hope of reaching the targets in the Paris Agreement. But the green energy transition has gained unstoppable momentum, driven by competitive prices and market demand.

It is abundantly clear that the existential threats we face cannot be tackled by one country alone, and that even the strongest individual country will not prosper in the long term by pursuing an isolationist or entirely self-interested agenda.

International law must be applied universally. No country is above the law. But the double standards being displayed by some states, particularly the most powerful, weaken the credibility of global institutions charged with upholding the rule of law.

Russia’s war on Ukraine remains an act of aggression against a sovereign state and a fundamental attack on the UN Charter with global ramifications. The Elders suppo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war crimes to justice, and all efforts to ensure the leadership are held accountable for the crime of aggression.

The Elders also wholeheartedly support the ICC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ir work to hold Israel to to account under international law for its actions over the last year in Gaza. Hamas must also be held accountable for its crimes and violations in the conflict.

We oppose any attempts to de-legitimise this work, and threats of punitive measures and sanctions against the ICC Prosecutor or other officials.

The rule of law must be applied consistently. Autocrats like to cite double standards in order to frame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enshrined in the UN Charter as hypocritical Western constructs. They are not, regardless of whether certain states display hypocrisy or selectivity in when to champion them. They serve the interests of every country.

All leaders and citizens alike share the responsibility to reject a slide into disorder and anarchy, and restore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diplomacy and the rule of law.

For the past year, The Elders have been advocating for a new approach by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based on what we call “long-view leadership”.

Long-view leadership means showing the determination to resolve intractable problems not just manage them, the wisdom to make decision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reason, and the humility to listen to all those affected. Long-view leaders must have the moral strength to address both current concerns and long-term risks, often at the expense of vested interests.

Such values should be common to all political leaders. But they are woefully missing in so many. We need leaders, women and men, who consistently demonstrate the courage to:

- Think beyond short-term political cycles and deliver solutions for both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 Recognise that enduring answers require compromise and collaboration for the good of the whole world.
- Show compassion for all people, designing sustainable policies which respect that everyone is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 Uphold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accept that durable agreements requi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Commit to a vision of hope in humanity’s shared future, not play to its divided past.

To translate these principles into policy, leaders need to act in the interests of living and future generations, and cannot claim that the danger is hypothetical or too far in the future to merit attention now.

The impact of these existential threats is already being felt across the globe: a rapidly changing climate, a pandemic that killed millions and cost trillions and wars in which the use of nuclear weapons has been openly raised.

Last year saw growing global alarm at the out-of-control race to build increasingly powerful AI systems, without meaningful safeguards or oversight. Global temperature rises have



2024-12-04

The KoreaTimes

The G20 must act now on the development crisis

As witnessed in the agenda at the G20 Summit, the world faces a development crisis. The poorest nations, home to one in ten people, have remarkable opportunities to accelerate development but are also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including the longtail of COVID-19, a debt crisis, growing rates of hunger and the threat of conflict.

Lower-income countries have young populations with highly promising potential, yet millions of inhabitants have yet to escape the extreme poverty that COVID-19 exacerbated. The economic growth prospects of these nations are strong, but high interest rates are pushing debt levels to ever more unsustainable levels. And although these countries are relatively low contributors to climate change, they have become victims of the climate crisis. This cannot be justifi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aris Agreement, adopted during my tenure a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ddress our most urgent challenges — the restoration of human dignity and a resett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At the UN and in Paris, world leaders unanimously promised to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that they would achieve these goals by 2030. However, these promises we made for our children are in peril, and growing geopolitical tensions and uncertainties put us at risk of breaking them.

Now is the time for us — and particularly for G20 leaders — to put our words and pledges into practice. If a tenth of their own electorates faced similar issues, governments would respond immediately, driven by what is right and necessary



By Ban Ki-moon

to do, but also to prevent unpredictable knock-on effects on the rest of the population. We cannot mitigate the global risks and challenges of inaction, and action will require significantly scaled-up investment. Much of that investment will need to come from governments, particularly in richer nations like the G20.

On the bright side, a group of forward-leaning countries are responding with bold commitments. At the G20 Summit, the Republic of Korea stepped up and made an early and ambitious pledge of a 45 percent increase or 846 billion won

exceeded the 1.5-degree threshold for the first time. Pandemic response approaches have fallen back into the cycle of panic and neglect that proved so devastating during Covid-19.

The demands of long-view leadership may sound Utopian but in fact they are rooted in recent political history. Similar steps have been taken before, and can be done so again if there is sufficient political will.

For example, barely a decade after the first atomic bombs were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and with the Cold War already well entrenched,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their respective allies agreed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he commitment of Cold War leaders to agree multilateral non-proliferation agreements like the NPT and the 1972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should be recalled by their counterparts today. Likewise, the efforts to secure the Montreal Protocol of 1987 and the rebuilding of the ozone layer demonstrate effective multilateral agreements can have an impact.

A similarly pioneering approach, rooted in universal values and the principles of transparent, accountable governance, is needed today to maximise the benefits and reduce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the potential to radically change the very nature of human existence.

This is why the Elders are calling for continued leadership from the UN and member states to drive forward inclusive global governance of AI, following the Summit of the Future in September where the Global Digital Compact was adopted.

AI has the potential to bring great benefits to human life, including health, education and other aspects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owever, without proper global governance, supported by meaningful and enforceable regulation, the extraordinary rate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AI pose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s well as more immediate risks.

The Elders applaud recent initiatives in AI governance at regional,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as well as convenings by governments, scientists and industry leaders. The AI safety summit series has brought welcome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ina, as well as the proposal of an international network of AI Safety Institutes. These efforts are crucial to building and strengthening the legal and technical guardrails needed to

keep this transformative technology safe and secure.

This diversity of approaches can provide vital insights and differing perspectives on AI governance. But there is an urgent need to harmonise these efforts. A coordinated approach will ensure that all nations participate in shaping the future of AI, not just those with advanced AI capabilities, that knowledge and expertise is shared, and governance decisions are based on the global public good.

Dear friends,

Our world stands at a precipice.

We can unite in defence of the values of the UN Charter; we can confront vested interests to tackle the climate and nature crisis before it is too late; and we can insist that conflicts are resolved fairly, with justice for victims and accountability for those who commit atrocity crimes.

Or we can abandon hard-won gains and surrender to the doctrine that “might is right”; we can continue to prioritise short-term profits over the long-term health of our planet; and we can let war criminals get away with horrific acts in the name of political expediency or cynical realpolitik.

Eighty years ago, the world had fallen off this precipice and was struggling to clamber back.

2025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both the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and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The deadliest weapon the world has ever seen, and the birth of an institution designed to ensure that such a weapon would never have to be used again.

This strange symmetry represents the imperative of peace and diplomacy over conflict and catastrophe.

It is an imperative that has driven all my professional and public life. It is the imperative that led Nelson Mandela to found The Elders. And it is the imperative behind the Miwon Peace Prize.

The Elders are bound by Mandela’s mandate. The Miwon Prize gives fresh impetus, validation and responsibility to our mission.

We will not let you down.

Thank you.



to the World Bank'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the largest single source of grants and concessional loans for the world's 78 poorest and most vulnerable countries. Denmark and the United Kingdom made pledges of 40 percent increases, respectively from their last contributions. The United States pledged \$4 billion sustaining its position as the largest historic donor.

These actions have paved the way for the 21st replenishment of IDA of which the pledging conference will be hosted by Korea this week. This is a critical opportunity, for other donors to take their efforts to the next level and scale the collective outcome.

The issues that IDA is tackling are stark. More than 90 percent of those facing malnutrition and hunger live in IDA recipient nations. A quarter of the population of IDA recipients earns less than \$2.15 per day. More than half of IDA recipients are in acute debt distress.

These countries have fast-growing populations and remarkable assets that IDA can help them unlock. IDA funding can assist them in a time of crisis, but also help them progress towards a more self-sustaining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For instance, IDA recipients produce roughly a fifth of the world's gold, copper and tin, and around 25 percent of them have known deposits of critical minerals. In the field of solar energy, output is about a fifth lower than potential. Better management of such resources can help drive economic improvements.

My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exemplifies the impact of IDA, having transitioned from a recipient to a leading donor. Korea is a living example of meeting the compound challenges of extreme poverty, war, debt crise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We fully understand the suffering of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countries. The historic Korea-Africa Summit declaration adopted in June this year in Seoul highlighted the country's commitment to supporting the poorest countries in Africa, as part of it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Likewise, IDA has a proven track record in delivering impactful, affordable funding to lower-income countries. Its ability to use markets to leverage contributions makes it financially efficient while still offering very low-cost loans or grants to countries in distress. Alongside financing, IDA can partner with countries on policy and practice to deliver meaningful and lasting change.

To address the ongoing development crisis adequately, and to put the poorest back on a path to growth, I appeal to the leaders of other G20 governments to consider increasing their budget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cluding IDA to help the most vulnerable, in particular 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to escape from the fear of hunger and poverty. Justice can be achieved not by words, but by action.



후/원/안/내

후원계좌: 국민은행 99094073952 (예금주: 재단법인 보다는미래를위한반기문재단)

“반기문재단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모두
재단의 발전과 목적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후원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739-9094 / 이메일 : bkmfoundation@bf4bf.or.kr



<http://bf4bf.or.kr/>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2024 연간 활동보고서

발행인 반기문
발행처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발행일 2025년 3월
편집부 (11기 인턴) 박민영, 송예진, 이서린
디자인 바이제이디자인그룹(byj@byjdesigngroup.com)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33 내자빌딩 5층 (우:03176)
전화 02-739-9094
팩스 02-739-9095
이메일 bkmfoundation@bf4bf.or.kr
웹사이트 <http://bf4bf.or.kr/>

※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